

## 적극적 조치 동의 여부, 누가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 ... 장애인·저소득층에 비해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인지도·필요성 인식 낮아 청년세대 남성, '남성 불평등' 인식이 적극적 조치 동의 정도 가장 크게 좌우 적극적 조치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김원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 부연구위원)

김선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 부연구위원)

-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사회 운영의 핵심 원리로 '공정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적극적 조치가 공정성 및 능력주의를 훼손하고, 이로 인한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적극적 조치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음.<sup>1)</sup>
- 특히 '젠더 갈등' 국면에서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는 여성 할당제와 동의어로 이해되거나 여성을 우대함으로써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로 여겨지며 청년 세대 남성들의 비판에 직면해 있음.
- 그렇다면 성별·연령에 따라 적극적 조치에 대한 동의 여부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적극적 조치에 대한 입장 차이가 공정성에 대한 성별·세대 간 인식 차이에 기인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적극적 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설득이 필요한 지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는 적극적 조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만 18세~69세 성인 남녀 1,8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현재 시행하고 있는 15개 유형의 주요 적극적 조치를 정책 영역(교육, 채용, 의사소통) 및 정책 대상(장애인, 저소득층, 지역·지방인재, 양성, 여성)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대상별 적극적 조치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 동의 정도를 파악함.
- 이 글은 영역별/대상별 적극적 조치 인지도 및 필요성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요인분석을 통해 적극적 조치의 종류에 따라 동의 정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함. 나아가 회귀분석을 통해 적극적 조치 필요성 인식에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사회적 합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개입 지점을 도출하고자 함.

1) 마경희. (2021). 「적극적 차별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현황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사 개요>

구분	내용
대상	전국 만18세~69세 성인 남녀 1,821명
방식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조사
표본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에 의한 표본 할당 후 무작위 추출
조사기간	2022년 10월 14일(금)~10월 24일(월)
조사내용	적극적 조치 유형별 인지도 및 필요성 인식, 성평등 및 공정성 인식 등

## 적극적 조치 인지도

### ■ 장애인, 저소득층 등 다른 대상에 대한 적극적 조치에 비해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인지도 낮아… 10명 중 6명 비례대표 50% 여성 공천 의무조치 몰라

- 현재 적극적 조치 중에서도 여성 대상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장 과열되었으나, 정책 대상별 적극적 조치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다른 대상에 비해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알고 있다’는 응답보다 더 많았음.

- 장애인 대상의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는 모든 세부 제도에 대해 10명 중 약 7명 이상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중 가장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국회 및 지방의회 비례대표 공천 시 여성 50% 이상 추천 의무화’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 4명 이하 수준임.

- 이처럼 정책 대상에 따라 적극적 조치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가 뚜렷했지만, 교육·채용·의사결정 등 정책 영역에 따른 인지도 차이는 크지 않았음.

- 대체로 의사결정 영역에서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정책 영역에 비해 낮았으나, 교육 및 채용 영역에서는 정책 대상별로 인지도가 다르게 나타남.

● **적극적 조치의 유형별 인지도를 성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체로 여성보다 남성의 인지도가 높고,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는 특히 청년 세대에서 성별에 따른 인지도 격차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

- 모든 유형의 적극적 조치에 대해 여성보다 남성에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의 적극적 조치는 성별 인지도 격차가 약 2.0%p 내외로 크지 않았으나, 지역·지방인재와 여성 대상의 적극적 조치는 성별 인지도 격차가 약 8.0%p 내외로 다소 크게 나타남(<그림 1> 참조).
- 성별에 따른 인지도 격차를 연령대별로 구분해 보면, 50대·60대보다 20대 이하·30대·40대에서 성별 격차가 크고, 특히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에 대해 여성은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은 반면 남성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인지도가 높아, 성별 인지도 격차는 청년 세대(20대 이하, 3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표 1> 참조).

**<그림 1> 적극적 조치 유형별 인지도(n=1,821)\***

(단위: %)



\* 각 유형별 적극적 조치를 '알고 있다'에 응답한 비율임

<표 1> 성별\*연령별 적극적 조치 유형별 인지도(n=1,821)\*

(단위: %)

구분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지방인재			양성	여성					
연령	성별	공공부문 장해인 의무고용제	대학 입시 장해인 특별전형	민간부문 장해인 의무고용제	대학입시 저소득층 특별전형	공무원 선발 저소득층 별도전형	지방소재 대학 지역 고등학교 학생 특별전형	공공기관 소재 지역인재 우대채용	공무원 선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공무원 선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국회·지방 의회 비례대표 의원 공천 여성50% 이상 추천 의무화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목표비율 설정·달성 노력	이공계 대학 여학생 목표비율 설정·달성 노력	공공 연구기관 여성 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대학교원 채용 여성 목표비율 설정·달성 노력	자산 총액 2조 이상 상장법인 이사회 전원을 남성/ 여성으로 구성할 수 없게 함
20대 이하	여성	75.6	86.9	63.7	84.5	50.6	77.4	67.3	60.7	64.9	34.5	34.5	33.9	27.4	29.2	26.8
	남성	74.9	79.7	66.3	76.5	54.5	71.7	69.5	65.2	68.4	50.3	49.2	39.0	39.6	40.1	31.6
30대	여성	77.1	75.8	68.6	72.5	41.8	54.9	51.6	41.8	43.1	27.5	28.8	23.5	25.5	22.2	19.0
	남성	82.5	78.9	68.7	77.1	53.6	71.1	65.7	54.8	64.5	43.4	42.8	42.2	41.0	34.3	31.3
40대	여성	82.1	75.8	71.1	70.5	40.0	56.3	61.1	50.0	56.8	27.9	29.5	29.5	27.9	24.7	15.8
	남성	83.0	80.4	74.7	69.1	38.7	59.3	70.6	55.7	65.5	41.8	32.5	35.1	34.5	35.1	19.1
50대	여성	87.1	79.7	81.2	69.3	40.6	65.8	62.4	54.0	58.9	43.6	34.7	32.2	29.2	31.7	20.3
	남성	89.5	81.3	86.1	71.8	38.8	63.6	61.7	56.0	67.0	42.1	35.4	41.6	36.8	32.5	21.1
60대	여성	92.8	79.0	87.8	68.0	40.3	67.4	56.4	51.9	69.1	39.8	34.3	43.6	39.8	36.5	21.0
	남성	95.9	83.0	89.5	71.9	38.6	69.6	70.2	64.9	67.8	39.8	41.5	40.4	40.4	37.4	26.3

\* 각 유형별 적극적 조치를 '알고 있다'에 응답한 비율임

## 적극적 조치 동의 정도

### ■ 적극적 조치 동의 정도는 대부분 '보통(5점 중 3점)' 이상이지만, 상대적으로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에 대한 동의 정도 낮아

-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1점 매우 필요하지 않다~5점 매우 필요하다)로 측정한 결과, 대체로 보통(3점) 이상이며 특히 장애인·저소득층·지역·지방인재 대상 적극적 조치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높게 나타남. 그에 비해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낮았음.

- 적극적 조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 역시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정책 영역별 차이보다 정책 대상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장애인·저소득층·지역·지방인재 대상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3.30점 이상인 반면,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3.30점 이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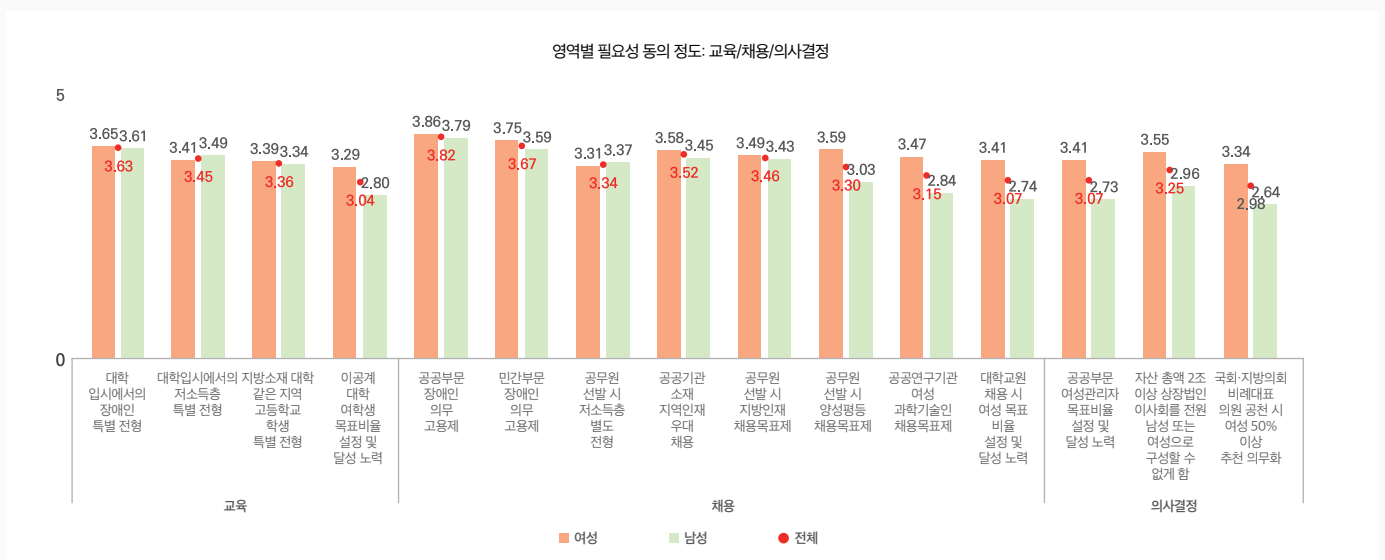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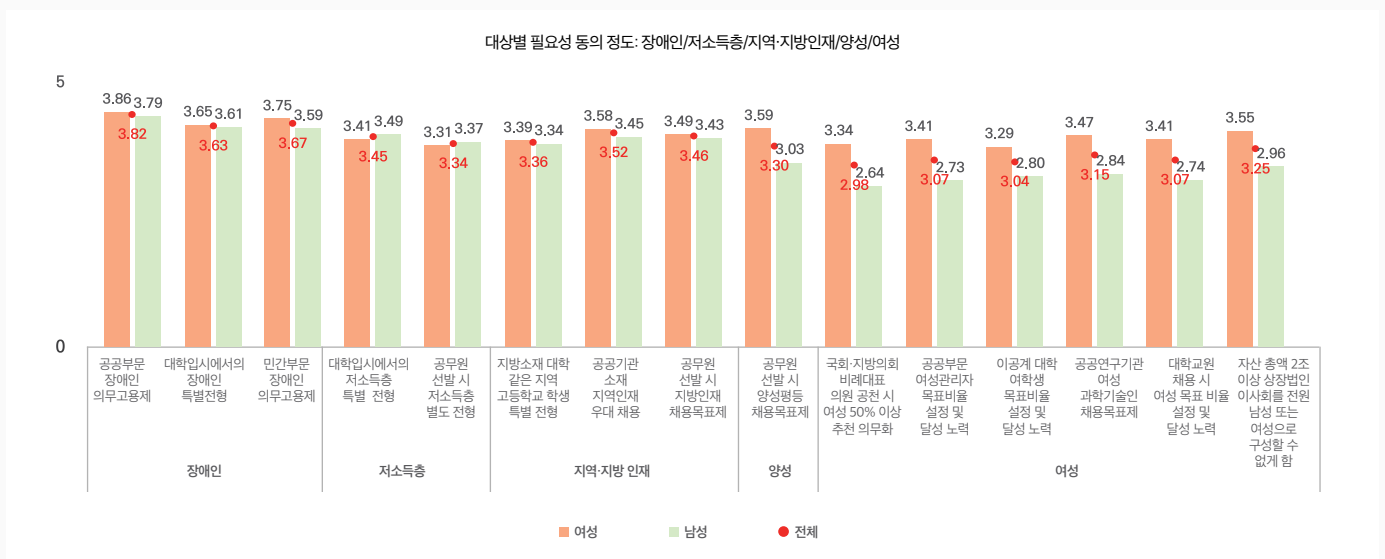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대체로 남성의 동의 정도가 여성보다 낮은 편이지만, 장애인·저소득층·지역·지방인재 대상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성도 모두 3.30점 이상으로 성별 차이가 거의 없거나 작은 반면,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성이 모두 3점 미만으로 동의 정도가 낮았음.

- **성별·연령별로 보면** 남성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필요성 동의 정도가 높아지고, 여성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필요성 동의 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의 경우 2030 세대에서 성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표 2> 참조).

- 장애인·저소득층·지역·지방인재 대상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는 20대 이하와 30대에서는 여성이 더 높지만, 50·60대에서는 오히려 남성이 더 높았음. 반면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동의 정도가 낮고, 특히 20대 이하와 30대에서는 남녀 간 격차가 1점 이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남.

<그림 2> 적극적 조치 유형별 필요성 동의 정도(n=1,821)\*

(단위: 점)



\* 5점 척도(1점: 매우 필요하지 않다~5점: 매우 필요하다)로 측정한 평균값임

<표 2> 성별\*연령별 적극적 조치 유형별 필요성 동의 정도(n=1,821)\*

(단위: 점)

구분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지방인재			양성	여성						
연령	성별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제	대학 입시 장애인 특별전형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제	대학입시 저소득층 특별전형	공무원 선발 저소득층 별도전형	지방소재 대학 지역 고등학교 학생 특별전형	공공기관 소재 지역인재 우대채용	공무원 선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공무원 선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국회·지방 의회 비례대표 의원 공천 여성50% 이상 추천 의무화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목표비율 설정·달성 노력	이공계 대학 여학생 목표비율 설정·달성 노력	공공 연구기관 여성 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대학교원 채용 여성 목표비율 설정·달성 노력	자산 총액 2조 이상 상장법인 이사회 전원을 남성/ 여성으로 구성할 수 없게 함	
20대 이하	여성	4.08	3.92	3.91	3.73	3.63	3.27	3.54	3.48	3.76	3.65	3.68	3.47	3.64	3.61	3.85	
	남성	3.51	3.48	3.19	3.46	3.21	3.06	3.18	3.21	2.59	2.10	2.26	2.28	2.30	2.20	2.49	
30대	여성	3.88	3.67	3.78	3.48	3.41	3.39	3.52	3.46	3.73	3.39	3.46	3.29	3.53	3.46	3.65	
	남성	3.60	3.44	3.46	3.40	3.36	3.12	3.19	3.20	2.61	2.34	2.43	2.48	2.43	2.40	2.68	
40대	여성	3.78	3.52	3.69	3.28	3.19	3.35	3.56	3.47	3.48	3.25	3.34	3.19	3.41	3.34	3.43	
	남성	3.77	3.66	3.64	3.54	3.40	3.28	3.51	3.45	3.13	2.78	2.80	2.80	2.93	2.84	3.05	
50대	여성	3.81	3.61	3.71	3.32	3.26	3.39	3.62	3.49	3.52	3.31	3.33	3.24	3.47	3.40	3.49	
	남성	4.02	3.78	3.83	3.62	3.55	3.62	3.68	3.63	3.39	3.00	3.07	3.19	3.21	3.11	3.30	
60대	여성	3.77	3.57	3.70	3.30	3.14	3.53	3.65	3.53	3.50	3.15	3.26	3.28	3.33	3.28	3.37	
	남성	4.01	3.68	3.81	3.41	3.27	3.57	3.66	3.62	3.35	2.92	3.08	3.19	3.26	3.09	3.23	

\* 5점 척도(1점: 매우 필요하지 않다~5점: 매우 필요하다)로 측정한 평균값임

● 정책 영역별/대상별 15가지 적극적 조치에 대한 필요성 동의 정도를 기준으로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적극적 조치 유형은 여성, 장애인·저소득층, 지역·지방인재 등 정책 대상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 선발 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음.<sup>2)</sup>

2) 요인분석과 함께 시행한 신뢰도 분석에서 여성, 사회적 약자(장애인·저소득층), 지역·지방인재 등 3개 구성개념의 Cronach's  $\alpha$ 값이 0.80이상으로 나타남

<표 3> 영역별/대상별 15개 적극적 조치의 유형화

구분		신뢰도 분석	타당도 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		
			요인 1	요인 2	요인 3
여성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목표비율 설정 및 달성 노력	0.945	0.871	0.174	0.183
	대학교원 채용 시 여성 목표 비율 설정 및 달성 노력		0.867	0.190	0.248
	공공연구기관 여성 과학기술인 채용 목표제		0.867	0.215	0.215
	국회·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공천 시 여성 50% 이상 추천 의무화		0.852	0.151	0.149
	이공계 대학 여학생 목표비율 설정 및 달성 노력		0.778	0.219	0.188
	공무원 선발 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0.766	0.273	0.202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법인 이사회를 전원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성할 수 없게 함		0.734	0.228	0.190
장애인·저소득층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제	0.871	0.188	0.831	0.152
	대학입시에서의 장애인 특별전형 선발		0.188	0.795	0.163
	민간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제		0.287	0.786	0.145
	대학입시에서의 저소득층 특별전형 선발		0.176	0.670	0.373
	공무원 선발 시 저소득층 별도 전형		0.255	0.621	0.411
지역·지방 인재	공무원 선발 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	0.863	0.246	0.259	0.848
	공공기관 소재 지역 인재 우대 채용		0.255	0.224	0.838
	지방소재 대학이 같은 지역 고등학교 학생 특별전형 선발		0.260	0.277	0.718
아이겐값			5.162	3.278	2.589
분산비율			34.413	21.853	17.263
누적분산비율			34.413	56.266	73.529

- 이상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과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재 적극적 조치에 대한 반발 및 논란의 핵심은 적극적 조치라는 정책 수단 그 자체, 또는 적극적 조치를 통해 개입하고 있는 정책 영역이 아니라, 정책 대상 - 특히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에 대한 견해 차이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적극적 조치 필요성 인식의 영향요인

### ■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필요성 인식에는 공정성 인식보다 성별이 더 큰 영향 미쳐 ... 적극적 조치 필요성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 결과

- 그렇다면 정책 대상별 적극적 조치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하에서는 개인적 특성,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함께 공정성 인식의 차이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앞서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3개 유형별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동의 정도를 종속변수로, 개인 특성(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공정성 인식, 제도에 대한 인지도 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함.

- 공정성 인식은 기회 및 보상에서 능력주의·평등주의와 사회적 형평성(약자에 대한 배려 및 포용) 중 어떤 것을 중시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능력주의·평등주의보다 사회적 형평성을 중시하는 게 공정하다고 보는 인식이 강함을 나타냄.

<표 4> 공통 회귀 모형의 독립변수 특성

독립변수	측정						
성별	남성				여성		
	50.9%				49.1%		
연령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19.5%	17.5%	21.1%		22.6%		19.3%
사회경제적 지위	최하층	하층	중하층	중층	중상층	상층	최상층
	3.1%	12.9%	32.3%	35.6%	13.5%	1.9%	0.7%
공정성 인식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		중립		저소득층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		
	44.5%		28.2%		27.2%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중립		사회적 약자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		
	45.3%		26.5%		28.2%		
제도에 대한 인지도	<그림 1>의 대상별 세부 적극적 조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빈도						

- 회귀분석 결과,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에는 성별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장애인·저소득층 및 지역·지방인재 대상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에는 공정성 인식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남(<표 5>).

- 단, 지역·지방인재 대상 적극적 조치 필요성 인식은 각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의미하는  $\beta$ 값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회귀모형의 설명력도 6.8% 수준으로 낮았음.

- 장애인·저소득층 및 지역·지방인재 대상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사회적 형평성으로 이해할수록 필요성 인식이 높고,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도 공정성 인식의 영향은 유의하지만, 그보다 성별이 인식 차이를 가져오는 핵심 요인임을 알 수 있음.

- 성별과 연령 변수는 장애인·저소득층 대상 적극적 조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고, 지역·지방인재 대상 적극적 조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했으나 성별의 상대적 영향력은 낮은 편임.

-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가 있으나 세 가지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인식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면 모르는 사람에 비해 적극적 조치에 동의할 가능성이 큼을 보여줌.



<표 5> 공통 회귀 모형: 적극적 조치 유형별 필요성 인식의 영향 요인

독립변수		종속변수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장애인·저소득층 대상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지역·지방인재 대상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beta$	t	$\beta$	t	$\beta$	t
개인특성	성별(기준: 남성)	0.325	15.138***	0.020	0.920	0.050	2.211*
	연령	0.137	6.382***	0.025	1.104	0.158	6.966***
	사회·경제적 지위	-0.062	-2.853**	-0.107	-4.762***	-0.066	-2.852**
공정성 인식		0.222	10.341***	0.296	13.287***	0.189	8.314***
제도에 대한 인지도		0.054	2.479*	0.122	5.443***	0.106	4.585***
통계량		R <sup>2</sup> =0.174 adj R <sup>2</sup> =0.172 F=76.556***		R <sup>2</sup> =0.111 adj R <sup>2</sup> =0.108 F=45.293***		R <sup>2</sup> =0.071 adj R <sup>2</sup> =0.068 F=27.710***	

\* $p < 0.05$ , \*\* $p < 0.01$ , \*\*\* $p < 0.001$

## ■ 청년세대 남성, 공정성 인식보다 ‘남성에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적극적 조치 동의 정도에 가장 큰 영향 … 남성 세대 간 영향 요인 중요도 다르게 나타나

-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기 위해, 아래 보완 회귀모형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한 성평등 인식 수준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였음.

- 본 조사에서 성평등 인식은 △성역할 고정관념 △가부장적 인식 △우리사회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 이상 세 가지 측면으로 측정하였고, 성역할 고정관념과 가부장적 인식은 5점 척도로 측정한 하위 항목의 합산 점수를, 우리사회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은 여성 불평등/남녀 평등/남성 불평등 - 세 집단으로 나눈 더미변수를 투입하였음(<표 6> 참조).
- 앞서 기술통계 분석에서(<표 2> 참조) 적극적 조치 필요성에 대해 성별에 따른 연령별 인식 차이가 상반되게 나타난 바, 연령이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보완 회귀 모형을 구성하여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시행함.<sup>3)</sup>

3)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중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 모형의 결과 값만 포함시킴

<표 6> 보완 회귀 모형의 독립변수 특성

독립변수	측정			
성역할 고정관념*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타인을 돌보거나 보살피는 직업은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	신체적 능력과 엄격한 자휘명령체계를 필요로 하는 직업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2.69점	2.07점	2.16점	2.38점
가부장적 인식*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	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2.58점	2.14점	3.02점	3.14점
우리사회의 성평등 수준 인식	우리 사회 전반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우리 사회 전반은 성평등하다	우리 사회 전반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
	53.6%		31.6%	14.8%

\* 5점 척도로 측정(1점: 매우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 분석 결과, 보완 회귀 모형에서 새롭게 추가한 성평등 인식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을수록, 가부장적 인식이 높을수록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인식이 높았고,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집단 대비 남성에게 불평등하거나 남녀가 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필요성 인식이 낮게 나타남.

- 일/가족 역할이나 직업에서의 성역할 분리에 반대할수록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으나, 가부장적 인식이 미치는 영향은 이와 반대로 나타남. 이는 가부장적 인식이 높을수록 온정주의적 시각에서 여성을 배려와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우리사회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여성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적극적 조치 반대 의사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성평등 인식보다 성별의 상대적 영향력이 여전히 크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필요성 인식이 높지만, 성별 조절효과가 유의하여 여성보다 남성에서 연령이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남.

- 연령에 따른 필요성 인식 변화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에서 독립변수만 투입한 1단계 모형(제도에 대한 인지도, 공정성 인식, 성평등 인식, 연령)의 설명력은 23.4%, 조절변수를 추가한 2단계 모형(성별 추가)의 설명력은 27.1%,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3단계 모형(연령\*성별)의 설명력은 29.4%로, 각 단계별 R<sup>2</sup> 변화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성별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함.

〈표 7〉 보완 회귀 모형: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필요성 인식의 영향 요인

독립변수			종속변수: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beta$	t
개인특성	성별(기준: 남성)		0.576	11.269***
	연령		0.216	7.073***
	성별*연령 상호작용항		-0.418	-7.841***
	사회·경제적 지위		-0.058	-2.853**
제도에 대한 인지도			0.092	4.515***
공정성 인식			0.206	10.357***
성평등 인식	성역할 고정관념		-0.212	-8.219***
	가부장적 인식		0.181	6.782***
	성평등 수준	남성에 불평등	-0.215	-9.504***
	(기준: 여성에 불평등)	남녀 평등	-0.150	-6.809***
통계량			R <sup>2</sup> =0.298 adj R <sup>2</sup> =0.294 F=76.938***	

\* $p<0.05$ , \*\* $p<0.01$ , \*\*\* $p<0.001$

- 다음으로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에 대한 동의 수준이 낮은 남성 집단 내에서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남성을 청년(만 18세~34세), 중년(만 35세~50세), 장년(만 51세 이상) 세대로 구분하여 추가 분석을 시행함(〈표 8〉).
- 남성의 세대별 추가 분석 결과, 청년 남성에서는 성평등 인식 중 남성이 불평등하다는 인식( $\beta=-0.451$ ,  $p<0.01$ ), 중년 남성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 $\beta=-0.298$ ,  $p<0.001$ ), 장년 남성에서는 공정성 인식( $\beta=0.241$ ,  $p<0.001$ )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 세대별로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필요성 영향 요인의 중요도가 상이함을 알 수 있음.<sup>4)</sup>
- 청년세대 남성 역시 공정성을 사회적 형평성보다 능력주의·평등주의로 인식할수록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인식이 낮았으나 이는 청년세대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양상은 아니었음. 그보다 우리사회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적극적 조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세대보다 크게 나타남.
  -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며 오히려 남성에게 불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청년세대 남성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음.

4) 여성의 경우 동일한 세대별 분석에서 청년, 중년, 장년 세대 모두 성역할 고정관념이 핵심 요인으로 나타남.

<표 8> 보완 회귀 모형: 남성의 세대별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필요성 인식의 영향 요인

독립변수			종속변수: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청년세대		중년세대		장년세대	
			$\beta$	t	$\beta$	t	$\beta$	t
사회경제적 지위			0.030	0.502	-0.055	-1.066	-0.187	-3.673***
제도에 대한 인지도			0.016	0.273**	0.080	1.545***	0.127	2.474
공정성 인식			0.235	4.157***	0.155	3.036**	0.241	4.831***
성평등 인식	성역할 고정관념		-0.189	-2.636***	-0.298	-4.865***	-0.105	-1.807
	가부장적 인식		0.292	4.026***	0.237	3.941***	-0.020	-0.346**
	성평등 수준 (기준: 여성에 불평등)	남성에 불평등	-0.451	-5.418**	-0.248	-4.296*	-0.164	-3.132**
		남녀 평등	-0.251	-3.025	0.147	-2.576	-0.149	-2.817*
통계량			R <sup>2</sup> =0.249 adj R <sup>2</sup> =0.227 F=11.589***		R <sup>2</sup> =0.175 adj R <sup>2</sup> =0.157 F=9.700***		R <sup>2</sup> =0.171 adj R <sup>2</sup> =0.154 F=9.989***	

\* $p < 0.05$ , \*\* $p < 0.01$ , \*\*\* $p < 0.001$

##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 최근 ‘젠더갈등’ 국면에서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나, 정작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들을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았음.
  - 장애인, 저소득층, 지방·지역인재 대상의 적극적 조치는 적어도 10명 중 5명 이상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는 10명 중 4명 이하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함.
  -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중 가장 인지도가 높았던 ‘국회·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공천 시 여성 50% 이상 추천 의무화’ 조치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9.3%뿐이었음.
- 능력주의 관점의 공정성 인식이 확산되면서 적극적 조치 전반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논의가 많았으나, 적극적 조치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제도 자체 또는 시행되는 정책 영역보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지방인재 대상 적극적 조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는 모두 3.30점 이상인 반면(‘필요하다’ 응답 비율 최소 45.5%~최대 71.4%),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필요성 동의 정도는 모두 3.30점 이하임(‘필요하다’ 응답 비율 최소 33.4%~최대 44.7%).
- 영역별/대상별 15개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동의 정도 요인분석 결과 △여성 △장애인·저소득층 △지역·지방인재 등 대상에 따라 3개 요인으로 분류되어, 적극적 조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정책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장애인·저소득층 대상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는 성별이나 세대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녀 간, 특히 청년세대 남녀 간 의견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은 남성도 장애인·저소득층 대상 적극적 조치에는 동의 수준이 높았고, 회귀분석에서도 성별과 연령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음.
- 반면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는 20·30대 남성은 2점 이하로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고, 20·30대 여성은 3.30점 이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
- 회귀분석 결과,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인식은 성평등 인식이나 공정성 인식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보다 성별 자체가 필요성 인식 차이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짐.

● **남성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년 세대에서는 남성이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중년 세대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장년 세대에서는 공정성 인식이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남.**

- 공정성 인식의 차이는 모든 세대에서 적극적 조치 동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청년세대만의 특이성은 아니며, 그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며 오히려 남성에게 불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청년세대 남성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음.

●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시행 중인 여러 적극적 조치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함.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는 특히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더 중요할 것임.

- 대상별 적극적 조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에 대해 ‘필요없다’는 응답이 다른 제도보다 더 많았지만, 제도를 모른다는 응답 역시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가 가장 많았다는 것은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여성이 대상이라는 이유로 막연한 반감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여줌.
- 따라서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여러 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널리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함.

● 우리사회 성평등 수준에 대한 상반된 인식이 청년세대 남성에서 적극적 조치에 대한 반감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진 바, 각 영역별 성평등 수준에 대한 공유된 인식을 확립하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 영역이 어디인지를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함.

- 적극적 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를 시행하려는 해당 영역·분야의 성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어야 함. 각 영역·분야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와 함께 성별 불균형으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 문제를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지금의 인식 격차를 좁혀 나갈 수 있음.
- ‘우리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차별받는가’하는 추상적인 논쟁을 되풀이하는 데서 나아가 성별 불평등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그래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구체적인 영역이 어디인가에 대한 논의가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임.